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보고회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6개월간의 고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를 시스템화·제도화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 인프라로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이 뒷받침되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명칭도 새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국 112개 고용안정센터가 일자리 조성,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One-Stop 서비스, 심층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담당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집중 투자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등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 등 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업무·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중장기 과제로서 고용과 복지 시스템 연계 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